

미래대응기금은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예산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7.6. 서울경제는 「국회 통제 약해진 100조 미래기금… 정부 째짓돈 되나」 기사에서,
 - “정부가 반도체발(發) ‘추가 세수’를 재원으로 ‘미래대응기금’을 만들기로 하면서 국회의 예산 통제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”가 나오며, “향후 수년간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막대한 재정을 별도의 틀에서 운영하게 되면 국회의 견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”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.
 - 모든 정부 기금은 국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있으며, 이는 신설 기금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. 따라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‘정부 째짓돈’이 될 수 없으며, ‘상시 추경’을 편성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닙니다.
 - 또한 미래대응기금의 규모, 적립방식, 세부 투자방향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,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예산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하치승 (hcs017@korea.kr)
	기금운용계획과	책임자	사무관	박성준 (bbakko0@korea.kr)